



## 부/록/목/록

### <NSPR④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부록내용>

- Appendix 1. 제3차 6자회담 결과(2004. 6. 28)
- Appendix 2. 한일 정상회담 북핵 관련 모두 발언 및 기자회견
- Appendix 3. 켈리차관보 상원외교위원회 북핵 연설(2004. 7. 15)
- Appendix 4. 미 볼튼 차관보 연세대 강연 (2004. 7.21)
- Appendix 5. 아인혼 페이퍼 (2004. 9.14)
- Appendix 6.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외무성 대변인 성명  
모음 (2003. 12. 15~ 2004. 10.4)  
(이상은 NSPR-1부록1.PDF 파일내에 수록)
- Appendix 7. CRS Report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NSPR-4부록2.PDF 파일을 다운 받을 것)

### < NSPR① 북핵문제와 6자회담 부록내용><sup>1)</sup>

- Appendix 1.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결과 (2004 5.11)
- Appendix 2. 제2차 6자회담 결과 (2004. 3. 2)
- Appendix 3. 제1차 6자회담 결과 (2003. 9. 1)
- Appendix 4. North Korea's Legacy of Missed Opportunities  
(Mitchell B. Reiss: Mar.12, 2004)
- Appendix 5. The Bush Administ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John R. Bolton: Mar.30, 2004)
- Appendix 6. James A. Kelly Speeches (May3, 2004; Jun.2, 2004)
- Appendix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외무성 대변인 성명, 노동  
신문 사설 (2002.10.25 ~2004.5.15)
- Appendix 8. 북핵일지 (1950년대~ 2004.6.12) (EAI 11월 25일 (월)  
인터넷 판에 추가예정, www.eai.or.kr)

1) 2004년 6월 이전까지의 각 국 입장에 대한 문헌자료는 NSPR①의 부록을 참조할 것.  
([http://www.eai.or.kr/eai\\_db/view\\_eaidb.asp?pk\\_n4No=14&page=1](http://www.eai.or.kr/eai_db/view_eaidb.asp?pk_n4No=14&page=1))



Appendix 1. 제3차 6자회담 결과

第3次 6者會談 結果

2004. 6. 28(月)

外 交 通 商 部



## I. 會談 概要

- 기간 및 장소 : 6.23(수)-26(토), 베이징 조어대
  - ※ 6.21(월)-22(화) 제2차 W/G 회의 개최
- 주요 일정
  - 전체회의, 수석대표 회의(2회), 차석대표 회의
  - 회담 기간중 수시 한·미·일 3자협의 및 남·북협의
  - ※ 본회담 개최전 남·북, 한·미, 한·미·일 3자, 한·중, 한·러 협의 개최

## II. 會談 主要 結果

### 1. 의장 성명 채택

- ※ 참가국간 합의에 의한 의장 성명 채택
- 실무그룹회의 운영에 관한 개념문건(concept paper) 승인
-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의지 재확인 및 이를 위한 초기 단계 조치들(first steps)의 조기 이행 필요성 강조
-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 추진 필요성 강조
- 공통의 기반확대 및 기존 차이점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공감
  - 제시된 제안들이 향후 논의의 유용한 기초가 된다는 데 주목
  - 참가국들간 이견이 남아 있다는 데 유의
- 4차 6자회담을 9월말 이전 베이징에서 개최기로 원칙적 합의
- W/G를 조속히 개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검증, 기간) 및 상응 조치들을 구체화하고 4차 본회담에 건의

### 2. 主要 事案別 參加國 立場

#### □ 핵폐기 원칙

-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국제적 검증 하에 투명하고 철저히 폐기할 것을 요구
  - 미·일도 CVID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언급



-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 포기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
- 중·러는 핵폐기 원칙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표현은 불사용

#### □ 핵동결/폐기 방안

-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고 동결할 것을 제안
  - 국제적 감시하의 동결 및 단기간내 핵폐기 과정으로 이행
- 북한은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재처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동결하고, 동결기간 동안 핵무기의 제조, 이전, 시험 중단
- 미국은 단기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한 폐기과정을 상정

#### □ 핵동결/폐기에 대한 상응조치

- 우리는 동결기간 중 중유지원, 북한의 에너지 수요 연구사업 개시, 잠정적 안전보장 제공,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제재완화를 위한 대화 개시 제안
  -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관계정상화 장애 제거 노력 가속화,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사업 획기적 증대 여건 조성,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환경 조성 가능
- 북한은 동결에 대한 반대 급부로 200만KW 능력의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북 경제제재·봉쇄 해제 요구
  - 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동참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제재해제 문제에 대해 신축성 발휘 용의 표명
- 미국은 단계적인 상응조치 이행 방안 제안
  - “초기 준비기간” 중 대북 중유공급, 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북한 에너지 수요 연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문제 협의 개시
  - 이후 폐기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서 항구적 안전보장 제공, 외교관계 정상화 장애 해소

#### □ 농축우라늄 문제

- 한·미·일은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이를 동결·폐기할 것을 요구
-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존재를 전면 부인



### 3. 觀察 및 評價

#### □ 본격적 협상 단계 진입 기반 마련

- 한국, 미국, 북한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질 논의 진행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first steps)을 가능한 조속히 취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CVID 표현에 대한 소모적 논쟁 차단
- 그러나, 핵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한 한·미·일과 북한간 입장차 상존
  - 핵폐기와 동결의 범위·검증·기간, 상응조치 등에 대한 이견

#### □ 6자회담 과정의 가속화

- 9월말 이전 4차 6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본회담 개최 간격 단축
  - 6개월 → 4개월 → 3개월
- W/G에 대해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최대한 빨리 개최한다는 데 합의
  -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의 범위, 검증, 기간 및 상응조치 구체화

#### □ 3차 본회담시 우리 대표단의 적극적 활동 전개

- 의장 성명의 내용, 개념, 문안 작성에 있어 상당한 역할 수행
  - 차기 회담 개최 시기 관련 우리측 방안 관철
- 회담기간 중 한·미·일 3자협의를 수시 개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한·중 간 논의 수준도 심화
- 남·북 대표단 간 의사소통이 일상화되어 회담 진전에 유용한 요소로 작용
  - ※ 1차례의 정식 남북 양자협의 뿐 아니라 수석대표 간 협의 매일 개최

### III. 向後 計劃

- 차기 본회담 및 W/G 회의에 대비한 여타 참가국들과의 협의 강화
  - ARF 외교장관 회담(6.30-7.2) 계기 한·미, 한·중, 한·일, 남·북 외교장관 회담 통해 회담성과 평가 및 후속 대책 협의
  - 러시아 외교장관 남·북한 방문(7.3-5) 계기도 활용



## Appendix 2. 한일 정상회담 복핵 관련 모두 발언 및 기자회견

### ■ 노무현 대통령 모두 발언

한·일 양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고이즈미 총리를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조금 전 정상회담을 갖고,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반 상호 관심사에 관해서 폭넓고 매우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작년 6월 한·일 공동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함께 열어간다는 비전을 재확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양국간에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일 두 나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 협상안이 제시되어 실질문제를 논의하게 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협상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서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포괄적·구체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하고 일본은 평양선언에 입각하여 북·일수교와 대북경협에 적극 나서는 등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한·일간 FTA 체결이 양국관계는 물론 동북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나라 국민 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우리 국민에게 우선 한시적으로 일본 입국비자를 면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두 정상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교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가 양국 국민간 우호 친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양국 정부 당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조기 정착과 재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각종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한·일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두 나라 정상이 격식에 구애받음 없이 보다 빈번하게 상호 방문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치인 교류와 시민사회간의 교류와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식견과 한·일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열의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일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



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 고이즈미 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한국어) 이번에 풍광면비한 제주도에서 아주 자연도 풍부한 산도 바다도 있고 하얀 그늘도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환경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붐이라고 해도 과장을 정도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영화 '실미도'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골프 치러 여행을 왔었지만 최근에 그것이 거꾸로 한국 분들이 일본에 와서 온천 그리고 골프를 많이 즐긴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일·한,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이라는 아주 기념할 만한 해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에 왕래하는 사람들은 연간 1만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국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여행자들은 연간 360만명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1만명이었던 것이 지금 하루에 1만명의 왕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양국 간에 국교정상화 40주년이라는 기념할 만한 해이지만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일한 양국 간의 우정이 넘치는 교류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서로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촉진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교류를 앞으로 촉진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경제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우정의 해이지만 일본의 아이치현에서 만국박람회가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여러분들이 만국박람회에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만국박람회 기간 동안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일본에 오시는 한국 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잠정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만국박람회에 맞춰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잠정적이지 않은 항구적인 비자면제도 검토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5월 22일 날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가졌던 회담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가 긴밀하게 공조를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미국하고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서로 강화시키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장래 동아시아에 열려있는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력해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의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나라들하고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과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것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회담 때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한국 측 여러분들의 아주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아주 가깝고 친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찬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횡수에 구애받지 않게 회담을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동경을 떠나서 다른 관광지 온천지에서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 질문: 노무현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듯이 지금 북한 핵 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6월 베이징 3차 6자 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아주 예민해 지고 있고, 특히 고이즈미 총리께서는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는 북한과 향후 1년 이내에 수교를 성사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하셨다. 이런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북핵 문제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께서 특별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달라.

▷ 노무현 대통령: 북핵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다할 만큼 진전이 느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이 짚어보면 한 발짝 한 발짝 진전해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번 6자 회담 때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된다. 조 기사가 표현하신 대로 그것이 급류이었거나 또는 적어도 9월 6자회담에서는 급류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란다.

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큰 행사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행사인 것은 사실이다. 누구든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우리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소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이 먼저 앞서야 한다. 지금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 일본, 미국이 공조하는 가운데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미국의 태도가 매우 결정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입장으로서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핵문제에 대한 발언권에...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북한의 입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지를 면밀히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정부가 그와 같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서두른다는 것은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저는 북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남북관계에 관해서 대화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될 때라야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북한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약속한대로 답방하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만났으면... 회담에 나와주기를 바랍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또 그것을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중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일본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 간의 신뢰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 측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개방과 개혁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만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또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이 성공했을 때 일본이 북한을 어떻게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 일본은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이즈미 총리께서 북한을 방문해서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고 어려운 남북자 문제를 풀어내고 또한 북일 간의 수교의 전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번 6자 회담에 있어서도 일본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회담 분위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한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또한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또 G8 회담에 가서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결국 북핵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설득의 노력들을 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이미 하고 있는 기여이다. 앞으로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이미 해 오신 대로 3자 공조를 토대로 해서 6자 회담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북한과 일본의 수교와 또 수교 이후의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지원 같은 것에 대한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를 모두 바라고 있다. 합리적 선택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 질문: 고이즈미 총리에게 여쭙어보겠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일본, 미국, 한국 세 나라의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어보겠다.



▷ **고이즈미 총리:** 우선 직접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일본과 북한이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재작년 9월 17일에 김정일 위원장과 협의했던 다시 일·조 평양선언 그것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한 수교는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일·조 평양선언 속에서 납치문제, 그리고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총합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양국간 일·조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것이다.

저의 임기는 2년 정도 있다. 그 사이에 일·조 평양선언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양국간의 수교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북한 측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2년 내에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2년 내에 그것이 안 된다면 수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조 평양선언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2년 내지 1년 내에서 수교를 정상화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한 3년, 4년, 5년 지나도 안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일·조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저는 시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지금 기자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서 3자간의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질문이 있었다.

5월 22일에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회담을 했을 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 목표이며 북한의 핵을 동결한다는 것은 검증을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회담을 통해서 일본, 한국, 미국 이 세 나라의 목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 나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 나라 국가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는 미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다.

▷ **질문:** 고이즈미 총리께서는 방금 전에 북일 수교문제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간에 말씀하셨던 1년 내 2년 내에 북한과 수교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신 입장에서 조금 물러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는지?

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 등 많은 여러 가지 난관을 말씀하셨지만 북한 핵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고 나올 경우에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시는 것이 핵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 정부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다. 특히 올 9월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이 동해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올 연말이



되면 지금 진행 중인 대북경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다.

▷ **고이즈미 총리** : 북한과의 수교와 관련해서는 후퇴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저희는 북한이 일조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언제든지 수교를 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납치문제, 미사일 문제, 핵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2년 내에 하고 싶고 빠르면 1년 내에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무튼 저희는 북한 쪽에서 일조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수교를 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후퇴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북한에게 핵을 갖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적다. 그것보다도 핵을 폐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전달해 나가야 한다. 저희는 6자회담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개최될 것이다. 거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문제는 미북 사이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이며 일본이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미사일 문제도 같다. 미사일 방위는 일본의 자주 방위를 생각했을 때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미국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한국하고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수로 케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한국측과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싶다. (끝, 북한관련 부분 발췌).



## Appendix 3. 켈리차관보 상원외교위원회 북핵 연설(2004. 7. 15)

###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James A. Kell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tatement to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July 15, 2004

(As prepared)

Thank you, Mr. Chairman, for this timely opportunity to meet with the Committee again to discuss the efforts of the United States and like-minded countries to deal with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I will focus my remarks on these four topics:

- a brief overview of the problem of the D.P.R.K.'s long-standing determination to move ahead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why previous efforts to achieve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did not succeed;
- the Bush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multilateral diplomacy to achieve th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ix-Party Talks;
- an explanation of the proposal the U.S. tabled at the thir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last month, and of the proposal tabled by the D.P.R.K.; and
- the opportunity the D.P.R.K. has now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reap the full rewards of trade, aid and investment ?and what North Korea'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ect in return.

####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re a longstanding threat. The D.P.R.K. leadership decades ago set out on a path that would allow it to acquire nuclear weapons. After conducting research throughout the sixties and seventies at a reactor provided by the Soviet Union, the D.P.R.K. began construction in 1979 of the 5-MWe reactor at Yongbyon, from which it could extract and reprocess plutonium. That reactor became operational in 1986.

In 1985, while construction was going on at Yongbyon, international pressure convinced North Korea to sig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However, it was not until 1992 that it finally signed 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and within months the IAEA found evidence of inconsistencies in North Korea's declarations. I should add that throughout the 1990s the IAEA continued to find the D.P.R.K. in non-compliance of its



safeguards agreement.

Also in 1992, the D.P.R.K.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but the North never moved to implement it.

By 1993, IAEA pressure for additional inspections led North Korea to announce it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e NPT. As tensions mounted, the U.S. and North Korea began high-level talks that culminated in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That agreement obligated the D.P.R.K. not to produce fissile material at its declared nuclear facilities at Yongbyon and its preface stated that its purpose was "an overal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greed Framework left resolution of pre-1993 discrepancies, especially quantities of plutonium that the D.P.R.K. might have recovered, for the distant future, linked to construction progress on the light water reactors provided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e Agreed Framework did not, as we learned later, end the North Korean nuclear arms programs. By the fall of 2002, our intelligence community assessed that North Korea was pursuing a covert program to produce enriched uranium in viol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D.P.R.K.'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fact, we determined that North Korea had been pursuing the program for a number of years, even as it was negotiating with senior American officials to improve relations.

By the way, our negotiator for the Agreed Framework, Ambassador Robert Gallucci, had left the North Koreans in no doubt that that any uranium enrichment program would violate the Agreed Framework. Ambassador Gallucci testified before Congress in December 1994 that the Agreed Framework required the D.P.R.K. to implement the North-South Joint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which precludes any reprocessing or enrichment capability. "If there were ever any move to enrich," he told this Committee, "we would argue they we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Agreed Framework."

I led a delegation to Pyongyang in October 2002 to confront the North Koreans with our assessment that they have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D.P.R.K. First Vice Foreign Minister Kang Sok Ju told us that the hostile policy of the U.S. Administration had left North Korea with no choice but to pursue such a program. When I pointed out our assessment that North Korea had been pursuing such a program for years, he had no response.

Instead of taking the opportunity we had afforded them to begin walking back their covert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 North Koreans escalated the situation. In December 2002, they expelled IAEA inspectors and began to reactivate the 5-megawatt reactor at Yongbyon. In January, the D.P.R.K.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NPT. And on several occasions in 2003, it declared it had finished reprocessing its 8,000-plus existing spent fuel rods. If that is indeed the case, it could have produced enough fissile material



for several additional nuclear weapons. Since then, the D.P.R.K. has stated it is strengthening what it calls its nuclear deterrent capability.

### **Multilateral Solution to a Multilateral Problem**

The United States has adhered to two basic principles to resolve this threat from the D.P.R.K. First, we seek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the D.P.R.K.'s nuclear programs nothing less. We cannot accept another partial solution that does not deal with the entirety of the problem, allowing North Korea to threaten others continually with a revival of its nuclear program. Second, because the North's nuclear programs threaten its neighbors and the integrity of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threat can best be dealt with through multilateral diplomacy.

I can report some progress to you on both counts.

Late in 2002, Secretary Powell began talking with countries in East Asia about a multilateral forum to make clear to the D.P.R.K. it must end its nuclear arms programs. He succeeded in persuading the Chinese, who in March 2003 took with them to Pyongyang the idea of five-party talks. The North Koreans resisted, but eventually agreed when the Chinese suggested trilateral talks in Beijing be held with the U.S., North Korea, and China.

After we consulted with our South Korean and Japanese allies, to ensure that they supported the idea and assured them they would be in future talks, we participated in the trilateral talks in Beijing April 23-25. By the way, it was at that forum that the North Koreans pulled me aside to say that they have nuclear weapons, will not dismantle them, and might transfer or demonstrate them. I strongly cautioned them against any escalation.

After those trilateral talks, we kept our promise and insisted that the next round of talks should include South Korea and Japan. We also supported Russia's inclusion. The Chinese did some more persuading, and the North Koreans agreed to participate in Six-Party talks. The first round was held in Beijing August 27-29, 2003.

The other five parties all told North Korea very clearly in plenary session that they will not accept North Korea's possessing nuclear arms. In response, the North Koreans threatened that they would demonstrate nuclear weapons. The North Korean belligerence at the Six-Party talks had the effect of isolating them. It was a useful first step in the difficult process of ensur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arms program.

The second round of Six-Party talks was in February 2004. The parties agreed to regularize the talks, and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to set issues up for resolution at the plenary meetings. At the second round of talks, the ROK offered fuel aid to the D.P.R.K., if there were a comprehensive and verifiable halt of its nuclear programs as a first step toward complete nuclear dismantlement.



The third round of talks, held late last month in Beijing, were useful and constructive. The working group met June 21-22, the plenary June 23-26. Over the course of that time in Beijing, the U.S. met directly with all of the parties. We held a two-and-a-half-hour discussion with the D.P.R.K. delegation. Some press accounts indicated that, during that meeting, the North Korean delegation threatened to test a nuclear weapon. The North Koreans said that there were some, not identified, in the D.P.R.K. who wanted to test a nuclear weapon and might presumably do so if there was not progress in the talks. The comment did not contribute to the comity of the meeting or to any atmosphere of trust.

In addition to the United States proposal, the ROK put forward a concrete, detailed proposal to achieve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The ROK proposal was consistent with the U.S. approach, but I will leave it to our South Korean ally to describe its proposal in more detail if it chooses. North Korea, too,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plenary, offering a proposal for what it describes as the first step toward full denuclearization -- a freeze of its nuclear-weapons related programs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from the other parties. The Japanese also had constructive ideas, strongly supporting proposals that would lead to the timely and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subject to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xpressing a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when it is verified that the D.P.R.K. is actually on the road to denuclearization. The P.R.C., as host, played a role in bringing the parties to Beijing for the third round and vigorously sought agreement on the basic principles that would underlie any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The Russian delegation, under the new leadership of Ambassador Alekseyev, also sought to promote agreement among all the parties, and offered details of their thinking. We had not expected breakthroughs and I have none to report to you. That said, all of the parties, including, in my view, the D.P.R.K., went to Beijing prepared for substantive discussions.

While each party is pursuing its own interests in the talks, all have publicly embraced the goal of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I thought it was significant that Chairman Kim Jong Il discussed the talks when he met with Prime Minister Koizumi last month, affirming North Korea's commitment to them. That said, proposals offered by the parties differ very considerably in substance, as I will detail now.

### **The U.S. Proposal**

The proposal the U.S. presented was developed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Under the U.S. proposal, the D.P.R.K. would, as a first step, commit to dismantle all of its nuclear programs. The parties would then reach agreement on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requiring, at a minimum, the supervised disabling, dismantlement and elimination of all nuclear-related facilities and materials; the removal of all nuclear weapons and weapons components, centrifuge and other nuclear parts, fissile material and fuel rods; and a long-term monitoring program.



We envisage a short initial preparatory period, of perhaps three months' duration, to prepare for the dismantlement and removal of the D.P.R.K.'s nuclear programs. During that initial period, the D.P.R.K. would:

- provide a complete listing of all its nuclear activities, and cease operations of all of its nuclear activities;
- permit the securing of all fissile material and the monitoring of all fuel rods, and;
- permit the publicly disclosed and observable disablement of all nuclear weapons/weapons components and key centrifuge parts.

These actions by the D.P.R.K. would be monitored subject to international verification.

At this juncture, I'll emphasize that, for the D.P.R.K.'s declaration to be credible and for the process to get underway, the North would need to include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and existing weapons, as well as its plutonium program. As of now, the D.P.R.K. is denying that it has a program to enrich uranium, and it speaks of an existing "nuclear deterrent" but has refrained from stating publicly that it has "nuclear weapons."

Under our proposal, as the D.P.R.K. carried out its commitments, the other parties would take some corresponding steps. These would be provisional or temporary in nature and would only yield lasting benefits to the D.P.R.K. after th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programs had been completed. The steps would include:

- upon agreement of the overall approach, including a D.P.R.K. agreement to dismantle all nuclear programs in a permanent, thorough and transparent manner subject to effective verification, non-U.S. parties would provide heavy fuel oil to the D.P.R.K.
- upon acceptance of the D.P.R.K. declaration, the parties would:
- provide provisional multilateral security assurances, which would become more enduring as the process proceeded. North Korea's rhetoric on this issue notwithstanding,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security assurances given through the multilateral Six-Party process would have considerably more weight than would bilateral assurances;
- begin a study to determine the energy requirements of the D.P.R.K. and how to meet them by non-nuclear energy programs;
- begin a discussion of steps necessary to lift remain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D.P.R.K., and on the steps necessary for removal of the D.P.R.K.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Secretary Powell told the D.P.R.K. Foreign Minister, at the ASEAN Regional Forum in Indonesia on July 2, that the U.S. proposal aimed to move forward on the dismantlement of the D.P.R.K.'s nuclear programs, and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concrete progress.





### **The D.P.R.K. Proposal**

The D.P.R.K. proposal restated its goal of a freeze for rewards, including energy assistance, lifting of sanctions, and removal from the list of countries sponsoring terrorism. We are continuing to study the North's proposal. As I noted, it is clear we are still far from agreement.

Our initial assessment is that the D.P.R.K. proposal lacks detail and is vague on a number of key elements. The scope is narrow in terms of the facilities covered and it ignores pre-2003 plutonium, nuclear weapons, and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North Korea would exclude the IAEA from verification, seeking to create a new verification regime from the Six-Party talks participants. This unprecedented approach would be hard to set up and carry out.

Still, there are some positive elements in positions the D.P.R.K. staked out. The D.P.R.K. claimed that the freeze would be the first step on the path to nuclear dismantlement, not an end to itself, and on that point we agree.

The D.P.R.K. also confirmed that whatever would be included in the freeze would also be included in the commitment to dismantlement further down the line.

Specifically, the D.P.R.K. said it would freeze all facilities related to nuclear weapons and the products that resulted from their operation, refrain from producing more nuclear weapons, transferring them, and testing them. The D.P.R.K. delegation clearly identified the 5-MWe reactor as a nuclear weapons facility. While they said they wanted to maintain a civil nuclear program, they also acknowledged that most of their nuclear programs are weapons-related.

We and other parties have questions about the D.P.R.K. proposal, including what the scope of the freeze and dismantlement would be. Again, inclusion of the D.P.R.K.'s uranium enrichment program is critical. We will continue to seek answers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though we have made clear all along that we are not talking for the sake of talking and that we expect tangible progress to be made. To that end, the parties agreed to hold the fourth round of talks by the end of September and a working group meeting in the interim as soon as possible to prepare for the fourth round.

### **North Korea's Choice**

Mr. Chairman, the Six-Party talks offer North Korea the opportunity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end its self-induced political and economic isolation, and to harness the benefits of normal international trade and aid, including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e have outlined what is necessary to transform our relations with the D.P.R.K., just as we have with another nation long iso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ibya.

President Bush in his February 11th remarks to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called on



other governments engaged in covert nuclear arms programs to follow the affirmative example of Libya. The Libyan case demonstrates, as President Bush has said, that leaders who abandon the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delivery means will find an open path to bett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free nations. When leaders make the wise and responsible choice, they serve the interests of their own people and they add to the security of all nations.

We have discussed Libya's example with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and we hope they understand its significance.

Of course, to achieve full integration into the region and a wholly transforme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must take other steps in addition to making the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It also needs to change its behavior on human rights, address the issues underlying its appearance on the U.S. list of states sponsoring terrorism, eliminate its illeg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put an end to the proliferation of missiles and missile-related technology, and adopt a less provocative conventional force disposit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ix-Party talks, the D.P.R.K. is undertaking measures in response to its disastrous economy. It is too soon to evaluate the nature or impact of these steps, but we hope they will serve as a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improved economic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By addressing the world's concerns about its nuclear programs and other issues, the D.P.R.K. would have both new resources and opportunities to pursue policies for peaceful growth in the region that is already perhaps the world's most vibrant, East Asi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ltimately will gauge the results of the Six-Party talks to assess the seriousness of the D.P.R.K.'s professed willingnes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lthough I remain optimistic on where the talks could lead, I personally could not say at this point that the D.P.R.K. has indeed made the strategic calculatio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n return for real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trade, aid and economic development. My hope is that the serious and extensive discuss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will convince the D.P.R.K. that a truly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is its only viable option.

I believe that diplomacy is the best way to overcom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that the Six-Party process is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Our aim is to fully and finally resolve the nuclear problem, not to implement half measures or sweep the problem under the rug for future policy makers to deal with. We are pursuing this course patiently and are committed to its success.

That concludes my statement, Mr. Chairman, and Mr. DeTrani and I look forward to responding to your questions. [End] Released on July 15, 2004



## Appendix 4. 미 볼튼 차관보 연세대 강연 (2004. 7.21)

### Lessons from Libya and North Korea's Strategic Choice

by John R. Bolton, Under Secretary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U.S. Department of State

New Millenium Hall,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Wednesday, July 21, 2004

#### **Introduction**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to be back in Seoul and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before this distinguished audience. It has been a remarkable year. In the past twelve months, we have witnessed a number of momentous events, all of which point to one inescapable conclusion: we live in a safer world today than we did one year ago. There are still regimes that support terrorism, but there are fewer today than before. Over 40 nations are working together to ensure that Afghanistan no longer provides safe harbor to the terrorists of al Qaeda. In Iraq, over 30 nations worked together to ensure as smooth a transfer of power as possible to the people of Iraq. With Saddam Hussein captured and awaiting trial in his own country, Iraq no longer poses the threat it once did to the region or the outside world. Within Iraq, people can now breathe air free of threat that chemical agents will again be shelled upon their villages by Saddam's armies. And most importantly, and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the Iraqi people have the opportunity to taste freedom and govern themselves, free from the tyranny of a brutal dictator. We thank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your courageous support in helping to make this happen. It will not be forgotten, and we view your support as a testament to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The world is also safer because of our actions against the shadowy entities and companies operating within states often times 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of their home governments. Here I am referring to the work of over 60 nations now participating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nd the unearthing and disruption of the black market arms network of A.Q. Khan. As President Bush stated, "Three years ago, a private weapons proliferation network was doing business around the world. This network, operated by the Pakistani nuclear scientist A.Q. Khan, was selling nuclear plans and equipment to the highest bidder, and found willing buyers in places like Libya, Iran, and North Korea? We have [now] ended one of the most dangerous sources of proliferation in the world, and the American people are safer." So are the people of the world. Left unchecked, A.Q. Khan's criminal network would have succeeded in supplying critical components for nuclear weapons to a number of outlaw regimes whose intentions were certainly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our friends and our allies.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helping roll up the A.Q. Khan network. And new nations are



continuing to join in the activities of PSI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alling into the hands of outlaw regimes and terrorists.

Finally, the world is safer today than one year ago because of an event unprecedented in modern history: after years of isolation and being caught up in a web of sanctions, the leader of a regime made a simple, but profound strategic choice—h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his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de his country and his regime not more, but less secure. It is not just the outside world that has benefited. Indeed, what a difference a year has made to the people of Libya since Colonel Qaddafi made and acted upon that bold and momentous decision.

I will describe these benefits in a moment, but let me assure you at the outset that my reason for doing so is not because I believe this audience has a profound interest in the politics of North Africa. Almost exactly a year ago, I spoke of the strategic choice faced by Kim Jong Il. I spoke of how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ould advance once it stopped devoting the country's scarce resources to the pursuit of weapons of terror and mass destruction. I spoke of how the long-suffering people of North Korea would benefit enormously from exchanges and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the outside world.

Sadly, one year later, the leader of North Korea has not made that strategic choice to move away from the destructive legacies of the past and place his people first. He still fails to recognize that his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kes North Korea less, not more secure. When I spoke a year ago, some may have doubt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fulfill its pledge to put relations on a new plane once North Korea fulfilled its pledge to verifiably dismantle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n a complete and irreversible way. Those doubts should now be dispelled. The reason is that I can offer empirical proof of how the United States acts toward such regimes when they learn from their past mistakes and work to make amend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t there be no doubt: the case of Libya has shown concretely the benefits that can flow when leaders of isolated regimes make the strategic choice to invest in their countries future, and not i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be sur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s of North Korea and Libya, but whatever cultural, historical, geographical and natural resource differences separate the two, they share an important commonality: the primary obstacle to both countries' prosperity and development has been the decision by their respective rulers to pursue terrorist activities, pursu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rample the human rights of their citizens.

The paths of North Korea and Libya, however, have now diverged. Colonel Qaddafi has made a strategic choice to put his people before his unjustified fears of a U.S. invasion. Kim Jong Il has not.

I read with great interest a recent quote attributed just a few days ago to North Korea's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Ambassador Han Sung-ryol. In those remarks, he rejected the model of Libya as being applicable to the DPRK, saying his country was "not interested." What was most telling, though, was his next comment where he remarked: "How can we trust the U.S. when a powerful country like the U.S. doesn't trust u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simple, and, building on the U.S. presentation at the Six-Party Talks, I will again attempt to answer it now.

### **Libya: A Model for the DPRK**

Ambassador Han is right when he says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trust North Korea. It would be fair to say, though, that the United States had no trust in Libya either. Only now are we building that trust slowly, but steadily and unmistakably, it is happening and we are doing it as part of a verifiable agreement in which Libya is giving up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n exchange for a new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outside world. The legacy of mistrust, though, had been well-founded. Libya, like North Korea, had been involved in the bombing of civilian airliners. Libya, like North Korea, was covertly developing WMD programs, in contravention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solving this conundrum with Libya was not easy, but we found a way. The answer was to be found in an old Russian proverb, one quoted by President Ronald Reagan in the context of negotiations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ose negotiations, President Reagan was asked about how to resolve the issue of lack of trust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His response to General Secretary Mikhail Gorbachev, was clear and direct: "Trust, but Verify."

And this is exactly how we approached the case of Libya. After decades of lying and deceit by Liby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sisted on the application of verification measures that m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uld g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fidence. When Libya approached us and said it was ready to abandon its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made clear to the Libyans that historical realities would compel us to verify their declaration. After some discussion on the modalities of that verification, the Libyans agreed.

After the initial declaration of facilities relate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is case not just nuclear but chemical and missile-related facilities, Libya allowed exper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o visit those facilities. Several months later into the discussions, Libya also agreed to visits by experts to non-declared facilities.

Once Libya agreed to rid itself of these programs, we took the next step by helping Libya to physically remove, disable, or dismantle most of the country's critical WMD infrastructure. There was no 'freeze' negotiated and the bulk of the elimination of their WMD programs took place within a relatively short time-frame of only a few months. To this day, along with the IAEA and the OPCW, the U.S. and the U.K. continue to work with the Libyans to increase our confidence that they will not reconstitute their WMD programs.

What has this meant for Libya and, more importantly, the people of Libya? The benefits have not just been in the abstract. They are direct and being implemented now. In response to Libya's actions to eliminate its WMD and long-range missile programs, Libya has seen the tangible benefits that bett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can bring. We are no longer enforcing some of the most important sanctions against Libya, including travel restrictions, trade



in oil and other important industries. U.S. government officials have noticed that formerly empty hotels in Tripoli are teeming with Western businessmen. The United States has opened a liaison office in Tripoli, and Libya is planning on reciprocating in Washington the first step, we hope, to the eventual reestablishment of full diplomatic relations. Libya participates in international meetings like those held by the OPCW, the IAEA not as a pariah nation, but as a partner in the laudable goals of these organizations. Libya's recent help to the World Food Program efforts in Darfur, Sudan, show that it is trying to rejoin the world community in a positive way.

We have sent doctors and scientist redirection experts to assist the Libyans in their efforts to modernize and redeploy the scientific and health care fields, redirecting efforts from WMD to more productive activities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Italian assistance, and under international supervision, the Libyans are converting the infamous Rabta plant from a chemical weapons factory to a pharmaceutical plant.

What bears mentioning, though, i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id not offer specific promises or rewards to the Libyans. Rather, we held out the most attractive incentive available: the ability to naturally reap the benefits that comes from participating fully in the community of nations. By ending its pariah status, Libya is no longer shunned by the outside world. Economic and security benefits have been the natural and inevitable result.

The principle, though, of not rewarding outlaw regimes merely for coming back into compliance with their past obligations is an important one for the United States to uphold. It is not only anathema to our values it is bad policy. It will encourage further violations not only with the state in question, but other rogue states as well.

### **Moving Forward with the DPRK**

How then do we move forward and encourage Kim Jong Il to make the strategic decision that Colonel Qhadaffi made? Ambassador Han lamented that the process with Libya was different than that with North Korea, commenting a few days ago that, "Even though the U.S. and the U.K. negotiated with Libya for eight months, there has been no type of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us."

But we do have a framework for such negotiations with the DPRK in place the Six-Party Talks. While the Six-Party Talks are a means to an end, we still believe it is the best venue at this time to realize the shared goal of all countries participating namely a Korean Peninsula permanently free of nuclear weapons. Indeed, the Six-Party Talks have enabled us to be open about discussing the benefits that will accru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once Kim Jong Il makes the strategic choice to abandon his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ther Six-Party partners, for example, have offered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even before the dismantlement process is complete, indeed, from the outset of the process.

Why should North Korea believe us? First,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kept its word to Libya and the evidence of that is clear for all, even Pyongyang, to see. Second, the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to the Six-Party Talks are present. The process and the negotiations themselves are transparent and the nations with the most at stake will be part of the solution



and its implementation.

It is critical, therefore, to have a truly multilateral solution. Some have accused the Bush Administration of igno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llowing it to fester given our refusal to engage in direct, bilateral negotiations. This criticism is off the mark. The U.S. government tried the bilateral route and it failed it was called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Contrary to what critics of the Bush Administration suggest, the Agreed Framework did not resolve the issue, it simply postponed it and ultimately made it worse. We tested Kim Jong Il's intentions when we rewarded him with carrots at the time and our reward was that he temporarily froze one nuclear weapons program based on plutonium, but started another based on uranium enrichment in secret. Eight years later, he was able to almost quite literally flip a switch to unfreeze and restart his plutonium program.

We have a saying: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We will not be fooled again. It would be the height of irresponsibility for the Bush Administration to negotiate a band-aid solution and leave the problem to some future administration when North Korea again decided to flip a switch and unfreeze its programs. We are interested in a lasting and meaningful solution to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was the fundamental failing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and it will not be replic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either in this term, or in our next. Given the sad history of our and oth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n the nuclear issue, halting ongoing nuclear programs can only make sense when it is explicitly and credibly part of a clear plan leading to rapid dismantlement.

Our experience with Libya shows that a freeze is unnecessary, and, moreover, would simply delay the time when the people of North Korea could reap the benefits of rejoi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the longer a freeze went on, the more we would question whether or not Kim Jong Il had truly made the correct strategic choice, or whether he was simply holding out for more rewards. The task of disabling, dismantling, and remo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though, is much larger and more complex than it was for Libya, so the sooner we can get started the better.

For our part, we need to see movement on the part of the DPRK's representatives at the next round of Six-Party talks. To the extent that these talks have not made more progress, it is for two primary reasons: 1) North Korea continues to deny that it has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and 2) North Korea continues to insist on maintaining a 'peaceful' nuclear program, when they themselves told us at the last round that most of their program, including the 5 megawatt research reactor, had military applications. We must have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objective facts before we can arrive at a meaningful solution. So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North Korea's continued denial of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precludes a solution to this problem. And so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knows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re primarily intended to support its nuclear arms programs. This is why we insist that the dismantlement of their programs must b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spite the slow progress, it is our confidence in the Six-Party process that compelled the



United States to specify in more detail the nature of our proposal at the last round. We hope North Korea is carefully studying our proposal and will avoid statements that dismiss it out of hand. So far, North Korea has not responded formally, but has complained publicly that the proposed timelines are "unscientific and unrealistic." We believe the case of Libya proves not only our sincerity and our willingness to make progress, but that it can happen. It was with this in mind that Secretary Powell remarked in reference to the Libyan situation, "we hope the North Koreans are watching all of this, and realizing that others are getting smart." Similarly, Kim Jong Il could follow the advice of Dr. Condoleezza Rice. She was serious when she expressed several days ago her hope that Kim Jong Il would talk to Colonel Qhadaffi. In so doing, he would learn of the benefits in store for his country upon re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system.

### **Time is Not on Our Side**

The seriousness of the more detailed U.S. proposal 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at the last round of Six-Party Talks should put to rest any reservations that our side is in a holding pattern until the next U.S. presidential election. We seek progress now. At the highest levels, we have demonstrated a seriousness of purpose to resolving this issue and end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possession or potential to transfer nuclear weapons or related materials.

As Vice President Cheney emphasized, while we will continue to approach to the Six-Party Talks with patience, we must be responsible to our citizens and recognize that it is the North Koreans who may be stalling. President Bush has made it clear that the Six-Party Talks are the best way at this time that we know of to achieve our goal of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all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ut we are not talking for the sake of talking and we must use all means at our disposal to prevent North Korea from threate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ither through its possession or through its potential exports of nuclear weapons and related material. It is for this reason that no option has or can be taken off the table or unconditionally ruled out.

This is why the Bush Administration has worked hard to achieve international consensus, not only through the Six-Party Talks, but in other multilateral fora as well. We worked with other members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which report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ough the Security Council has not acted. We have worked with members of APEC and ASEAN and the G-8 to make the world understand th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We have worked through the United Nations to condemn North Korea for the egregious abuse it inflicts upon its citizens starving in death camps. We are using all of these institutions to encourage, and yes, pressure Kim Jong Il to make the right strategic choice.

But don't tell us, least of all President Bush, that our proposal is "unscientific and unrealistic." Who would have guessed that just two weeks ag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ould be standing next to the dismantled components of Libya's now defunct nuclear weapons program at the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in Tennessee, declaring that: "We're working with responsible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convince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Iran that their nuclear weapons ambitions are deeply contrary to their own national interests."Ladies and gentleman, it does not get any more real than that.

There is, of course, the possibility that Kim Jong Il will not make the correct strategic choice. We are prepared for that as well. In that event, the world should know that even now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re not sitting idly by waiting for Kim Jong Il to see the light. Let me be clear: the United States and like-minded countries are doing all we can to stop North Korea from buying and selling the technology to produce nuclear weapons,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the means to deliver them. We have persuaded Libya and Yemen to renounce all military trade with North Korea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other countries to make the same decision.

We are also devoting considerable resources to interdiction efforts throug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North Korea likes to say that PSI is unfairly directed at it. North Korea is half right. It is directed at countries like North Korea, but not unfairly so. If North Korea wants to get out of the spotlight of PSI there is an easy way get out of the business of buying or selling weapons of terror and mass destruction. It is that simple. PSI is an activity that is not directed toward any one nation it is directed at the illicit transfer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worldwide. And it will not stop.

Few would have guessed that PSI would have become as successful as it has since President Bush announced it in Krakow, Poland, on May 31, 2003. Its successes are notable. It is not lost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was only a few months after a successful PSI operation against Libya that Colonel Qhadaffi made the pledge to renounce fully his pursuit of WMD.

This is not to gloss over remaining differences that we have with Libya these differences still exist. But a meaningful dialogue is taking place. The same can happen with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makes the strategic choice to abandon his pursuit of WMD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we can begin discussing a range of other important issues. It will not be easy and the list is long, ranging from North Korea's acts of state terrorism against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s, the disposition of conventional forces along the DMZ, and, of course, the trampling of the most basic of human rights of so many struggling to stay alive in North Korea.

But what a difference a year can make as the events in Libya show.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year and last stems from the simple, yet profound strategic choice by Colonel Qhadaffi, who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his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de him less, not more secure.

With Kim Jong Il, we are sadly still at that crossroads. The world is still waiting for Kim Jong Il to make the right strategic choice. Whatever his choice, though, we are prepared. In the words of President Bush: "There are still outlaw regimes pursu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the world no longer looks the other way. Today, because America has acted, and because America has led, the forces of terror and tyranny have suffered defeat after defeat, and America and the world are safer."

Thank you.[End]



## Appendix 5. 아인호른 페이퍼 (2004. 9.14)

###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Road Ahead**

by Robert J. Einhorn

#### **I. Introduction**

The following is a paper by Robert J. Einhorn, Senior Adviser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former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Nonproliferation in 1999 to August 2001. Einhorn writes: If the North Koreans have decided they must have a substantial nuclear weapons capability whatever we may do (hardly a remote possibility), they would likely reject a reasonable offer. In that event, the next U.S. administration would have little choice but to turn to a longer-term strategy of pressure, containment, and eventual rollback. But having made a proposal that North Korea's neighbors considered fair and balanced, we would be in a stronger position to gain multilateral support for that strategy.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licy or position of the Nautilus Institute. Readers should note that Nautilus seeks a diversity of views and opinions on contentious topic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ground.

#### **II. Essay by Robert J. Einhorn**

From the time it took office,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deeply divided on North Korea. One camp has assumed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voluntarily give up nuclear weapons, believed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cheat on any new agreement, and feared that such an agreement would prop up a tyrannical regime. This group has supported regime change as the most reliable way of disarming North Korea. The other camp, skeptical about Pyongyang's willingness to give up nuclear arms but dubious about prospects for regime change in the near term, has favored exploring a negotiated solution. For much of the past three year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mps have blocked a coherent approach towar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owever, after Colonel Gaddafi agreed in December 2003 to give up his nuclear program, a compromise (actually, more of a truce) was reached on the basis of what the administration started calling the Libya model according to which an autocratic regime, looking to end its international isolation, makes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quickly, completely, and transparently without the U.S. having to make concessions up front. Consistent with that model, if Kim Jong-il were prepared to follow Gaddafi's example and disarm on U.S. terms, the Bush administration would be willing to support the DPRK's integration into the world community, provide it assistance, and not



seek to topple its regime.

The Libya model was the basis for the U.S. proposal tabled in late June 2004 at the thir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It calls on North Korea first to make a clear commitment to dismantle all of its nuclear programs. Once that commitment is made, a three-month Preparatory period begins during which North Korea makes a full declaration about its programs (including uranium enrichment), all nuclear activities are verifiably halted, any nuclear weapons are disabled, and preparations are made for the elimination (including by shipment out of North Korea) of all nuclear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As Pyongyang takes credible steps during this preparatory period, the other parties reciprocate in various ways. Non-U.S. parties provide heavy fuel oil. A Provisional?multilateral security assurance is provided. The U.S. begins a Discussion with the DPRK about its non-nuclear energy requirements, the lifting of remaining U.S. economic sanctions, and the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U.S.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t the end of the three-month period, a relatively short, but as yet unspecified, elimination period begins.

The U.S. proposal was welcomed by the other participants. South Korea and China, which had repeatedly asked the U.S. to show more flexibility, were relieved that a detailed U.S. offer had been made. Even North Korea reportedly deemed the proposal constructive. Meanwhile, administration officials stressed that their fundamental position had not changed. North Korea still needed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abandon nuclear weapons, after which total elimination would have to be achieved quickly, not via a prolonged series of steps that would give the North opportunities to stall, renege, or extort further concessions. Moreover, the Bush administration would not pay the DPRK to live up to existing commitments. It would discuss future benefits and allow others to provide them early in the process, but the U.S. would not provide its own tangible rewards until dismantlement was essentially complete.

The DPRK's approach is very different. It calls on the U.S., as a means of showing that it no longer has hostile intent, to provide inducements from the start. It resists dismantling its programs quickly, claiming that would forfeit its leverage to get the U.S. to live up to the deal. To preserve its deterrent for as long as possible, it presumably will seek to prolong the process and structure it in such a way as to enable it to opt out if it judges that getting rid of its capability entirely would put it at the mercy of a still-hostile U.S. Indeed, North Korea's position so far in the talks reinforces doubts that it is prepared to give up its capability. While saying it supports de-nuclearization, it still denies having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and its freeze proposal seems to exclude plutonium produced before its January 2003 NPT withdrawal enough for eight or nine bombs.

There is little likelihood North Korea will accept the current U.S. proposal. It sees itself in a strong bargaining position. With American forces tied down in Iraq and stretched thin worldwide (and some U.S. troops even shifting from South Korea to Iraq), Pyongyang must calculate that a military threat from the U.S. is remote. Indeed, even before Iraq,



the DPRK's ability to devastate Seoul with its massive, forward-deployed conventional artillery and rocket forces was a strong inhibitor of U.S. military action. Economic factors do not compel DPRK flexibility either. Kim Jong-il appears to be serious about pursuing market reforms and probably realizes that such reforms cannot get very far if his country remains economically isolated because of the nuclear issue. But given the choice between maintaining his Powerful deterrent and promoting the success of the reform effort, it is clear that he will give priority to security.

Pressures facing North Korea have also been reduced by Pyongyang's successful strategy of seeking separate accommodations with its neighbors. By adopting a more conciliatory approach to North-South interactions in the economic, humanitarian, and even military areas (e.g.,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the West Sea), it has reinforced the inclination of Roh Moo-hyun's government to address the nuclear issue by offering carrots rather than threatening sticks. By taking steps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ese abductees, it has increased prospects for resumed bilateral normalization talks and opened some daylight between U.S. and Japanese positions on North Korea. Its charm offensive is also paying dividends with China and Russia, both of which gave considerable support to North Korea's position at the last six-party round.

There may still be one more round of talks before the November election but very little chance of making progress this year. North Korea knows the U.S. administration won't turn up the heat in an election year and, in any event, Pyongyang will await the election results before making changes in its own position. Meanwhile, the Bush administration, believing that its recent proposal has undercut Kerry campaign criticism of its North Korea policy, will be content to run out the clock for 2004.

In 2005, the next administration could move in one of two very different directions. After a decent interval of trying unsuccessfully to get the DPRK to accept the U.S. offer, some in a second Bush administration may push for blaming North Korea for the deadlock, declaring the talks a failure, and seeking to ratchet up multilateral pressure against Pyongyang, including by calling for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stepping up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nterdiction operations, and urging Japan to curtail trade and remittances. The goal would be to force North Korea to accept disarmament on U.S. terms or, if that does not prove possible, to contain, deter, and stifle the regime until it eventually collapses.

Such a strategy has little chance of succeeding. The idea that Pyongyang can be squeezed until it capitulates or collapses is wishful thinking. The regime has been surprisingly resilient, defying repeated predictions of its imminent demise. Moreover, neither China nor South Korea wants a sudden, destabilizing collapse in the North.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a U.S. negotiating position that Beijing and Seoul consider reasonable and since the June round, they have already begun calling for more U.S. flexibility both can be expected to resist U.S. appeals for squeezing the North and to continue providing the assistance needed to keep it afloat.



Reliance on pressure alone to disarm North Korea could result in the worst of all worlds. Kim Jong-il shores up his grip on power by resisting U.S. coercion; the DPRK continues augmenting its nuclear arsenal; the U.S. strains relations with the ROK and China in a futile effort to pressure them to coerce North Korea; and the South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continue to realign themselves toward China and away from the U.S., harming long-term American interests in East Asia.

A preferable approach, one likely to be supported by some in a second Bush administration or by a Kerry administration, would be to explore whether a sound agreement is possible. It would adopt elements of the Bush proposal (e.g., clear commitment to complete elimination and full disclosure of all programs from the outset), but it would provide for a phased elimination in a longer timeframe. At the same time, the U.S. would join the others in offering incentives in each of the phases, including from the beginning.

To be sure, this approach has downsides, including the risk that the North Koreans sooner or later would try to cheat or pull out of the process before dismantlement is complete. These risks can be minimized but not avoided, reflecting the reality that has faced the last three U.S. Presidents: there are no good option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An imperfect agreement is the least bad option.

Of course, if the North Koreans have decided they must have a substantial nuclear weapons capability whatever we may do (hardly a remote possibility), they would likely reject a reasonable offer. In that event, the next U.S. administration would have little choice but to turn to a longer-term strategy of pressure, containment, and eventual rollback. But having made a proposal that North Korea's neighbors considered fair and balanced, we would be in a stronger position to gain multilateral support for that strategy.

[End]



## Appendix 6.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모음

### ■ 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의 《북조선인권법안》은 대조선적대선언 (2004.10.4)

평양 10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회상원에서 《북조선인권법안》이라는것이 통과된것과 관련하여 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회상원은 내외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하원에서 제출한 《북조선인권법안》이라는것을 일부 수정보충하여 끝끝내 통과시켰다.

《법안》은 《북조선인권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체제의 전복활동에 가담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 미국정부의 예산으로 매해 2천 4백만 US\$를 지출한다고 규제하는 등 시종일관 악랄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독소조항들로 가득차있다.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그것을 가결하기 직전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란자가 《옛소련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북조선정권의 몰락도 멀지 않았다.》고 떠벌인데서 짐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결국 이번 《법안》은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의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진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놓은 또하나의 대조선적대선언이다.

우리 체제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이 골수에 차있는 미국이고 보면 그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되어 날뛰는것이 별로 이상할것은 없다.

그러나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락인되고있는 미국이 아직도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가타부타하는것은 인류의 량심을 우롱하는 도전이 아닐수 없다.

이라크에서 비법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살륙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러한 미국이 아무리 체면상실증에 걸렸다면들 이라크의 피바다우에서 《세계의 안전》을 부르짖으며 《인권》에 대해 론하는것은 참으로 역겹기 그지없다.

미국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재정물질적으로 적극 후원하는 한편 일부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며 우리 제도 《전복》을 위한 본격적인 환경조성에 달라붙고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힘의 정책만을 추구하면서 존엄높은 우리 식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정하고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한사코 강요하려 드는 부쉬행정부와는 오직 대응한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진리를 절감하게 하고있다.

미국은 우리와의 공존을 전면부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는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의미를 상실케 하고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은 고사하고 미국과 상종할 그 어떤 명분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미국과 힘으로 끝까지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강화에 더 박차를 가할수 밖에 없다.

미국이 우리 체제를 말살하려 들면 들수록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더 굳세여지고있으며 미국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을 맞받아 짓부셔버릴 적개심은 더더욱 높아지고있다.(끝)



## ■ 외무성대변인 성명, 제4차 6차회담의 전망 (2004.8.16)

(평양 8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 대변인은 제4차 6차회담의 전망과 관련하여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여러 기회에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이로부터 우리는 6차회담과정을 지속시켜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사실상 우리는 지난번 제3차 6 차회담에서 처음으로 유관측들이 본질적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동결 대 상응조치》 원칙에 따라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정세가 긍정적방향으로 발전할것을 크게 기대하였으며 우리의 신축성있는 제안에 대한 미국측의 호응을 인내성있게 기다려왔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심히 어긋나게 미국의 부당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그사이 정세는 달리 흐르고있다.

미국측은 지난 제3차회담에서 이룩된 모든 합의와 공동인식을 다 뒤집어엮으면서 우리의 핵동결에 따르는 《보상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 정책적립장을 명백히 하였는가 하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핵폐기》(CVID)주장을 다시 들고나오고 있다. 또한 있지도 않는 《농축우라니움계획》을 포함한 모든 핵계획이 다 폐기되어야 한다는니, 핵문제해결후에도 조미관계가 정상화되자면 인권,미싸일,상용무역,종교 등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니 하면서 지어는 군사적선택안이 탁상우에서 완전히 내리워진것은 아니라고까지 하고있다.

오늘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놀라움과 실망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발생근원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극도의 적대시정책에 있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문제가 해결되려면 응당 미국이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을 철회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저들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것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내놓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

최근에만도 미국회하원은 《북조선인권법안》을 채택하여 우리 체제전복을 재정물질적으로 보장하며 제3국에 그것을 강요하는것을 립법화하였으며 부쉬행정부는 집단담치행위와 《전파안보발기》(PSI)에 따르는 해상합동훈련을 주도해나서고 미군 《감축》의 미명하에 남조선에 130억US\$분의 최신전쟁장비를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다.

이 모든것이 적대시정책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옳은가.

결국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았댔자 나올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미국 때문에 6차회담과정이 오히려 후퇴하고있고 다음번 6차회담을 열어놓는다고 해도 결과를 기대할수 없는 속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회담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은 8월중순 뉴욕에서 진행된 다무적의견교환기회에 6차회담 실무그룹회의를 당장 뉴욕에서 하자고 다급한 제의를 하였는데 이것만 보아도 미국이 사실상 대화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생색이나 내보려 한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장시간의 뉴욕의견교환과 조미쌍무접촉기회에 명백히 확인할수 있었다.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행위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정세가 흘러야 핵동결이 실현되고 그것이 폐기에로 이어 질수 있겠는데 반대로 적대행위가 더 급증되고있으니 핵폐기는 고사하고 동결에로조차 움직일수 없게 되어있다.



이처럼 미국은 회담할수 있는 기초를 스스로 파괴하여 버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면한 6자회담실무그룹빠회의에 나갈수 없게 하고있다.

지금 미국측은 흑백을 전도하여 마치 우리가 미국대통령선거결과를 기다리며 회담을 지연시키는것처럼 불순한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이것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은 미국사람들이나 관심할 문제이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 누구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서든 철두철미 현실에 발을 붙이고 조성된 정세에 따르는 자주,자위의 정책에 기초하여 문제를 세워나간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 보상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천적으로 포기할 의지를 보여주는것으로 회담을 할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며 그에 필요한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끝)

## ■ 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의 《전향적인 제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2004. 7.24)

(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제3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전향적인 제안》을 놓고 불순한 여론을 내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미국의 《전향적인 제안》은 더 이상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호히 배격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부쉬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은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전향적인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더러 그 의미를 리해하고 《전략적인 타산》을 하기 바란다느니, 《북조선의 반응을 기다린다》느니 하면서 마치도 공을 우리에게 넘겨놓은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데 몰두하고있다.

그들은 지어 우리가 《선택포기》를 하면 《놀랄만한 대가》가 차례질것이라고 하면서 리비아의 전례를 따를것을 《권고》하고있다.

우리에게 대해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소리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지난 6월에 있는 제3차 6자회담에서 보다 대담하고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핵화가 총적목표라는것과 동결은 중국적인 핵무기계획폐기에로 가는 첫 시작이라는것을 명시하면서 핵동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었다.

우리의 《동결 대 보상》안은 조미사이에 그 어떤 신뢰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조건을 반영한 문제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인것으로 하여 6자회담마당에서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미국도 우리의 《동결 대 보상》안에 대해 류의하면서 심중히 검토할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미국측의 《전향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류의하면서 회담이후 부쉬행정부의 대조선 정책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왔다.

그런데 최근 부쉬행정부 고위관리들이 밝힌 정책적립장들과 결부하여 보면 미국의 《전향적인 제안》은 순수 눈가림식의 제안이었다는것이 스스로 명백해지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의 《제안》은 본질상 《전향》이라는 보자기로 감싼 《리비아식 선택포기》방식이다.





미국의 제안에는 저들도 이미 공약한바 있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조선반도비핵화의 기본걸림돌인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에 대한 공약은 물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적문제들이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다.

말하자면 우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저들의 요구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덜거하였을뿐이며 우리의 일방적인 핵폐기가 깨개 완료된 다음에야 저들이 할바에 대해 논의나 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리비아식》이 우리에게 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자체가 어리석기 그지없다.

더우기 부쉬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요즘 우리의 핵동결이나 폐기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떠들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핵동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회피하는것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의 기초를 허무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는 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에서 그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은 그만큼 료원해지게 될것이다.

모든 사실은 미국의 기준립장에서는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다는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전향적인 제안》은 더이상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실천적으로 포기될 때라야 비로소 달성될수 있다.

미국은 우리가 비핵화목표를 천명한데 맞게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를 공약하고 그에 따르는 첫단계보상조치로서 우리에게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를 해제하고 《테로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200만kw능력의 에네르기보상에 직접 참가해야 할것이다.

우리의 핵동결에 따르는 보상조치에 미국이 참가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핵문제해결의 열쇠로 된다.

조미가 정전상태,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적대일방이 타방에게 먼저 무장을 놓으라는 요구는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핵문제해결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도는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식이며 그 첫단계조치인 《동결 대 보상》안실현으로 조미사이에 한단계 한단계 신뢰를 쌓아나가는 길뿐이다.(끝)

## ■ 외무성 대변인 성명, 동결대상 및 검증방법에 대한 입장을 천명 (04. 7.14)

(평양 7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제3차 6자회담에서 우리가 《동결 대 보상》 제안을 구체화한 이후 국제사회의 일부에서 동결대상 및 검증방법에 대하여 그릇된 여론들을 내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제3차 6자회담에서 우리가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식의 첫 단계행동조치로 되는 《동결 대 보상》 제안과 관련하여 신축성있는 안을 내놓은후 미국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들은 그에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동결에 따르는 보상에 참가할 용의를 표명해나섰으며 광범한 국제사회계도 핵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건설적립장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응직임을 타고 최근 일부 세력들이 우리의 립장을 외곡하여 여론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각성을 가지게 된다.

지금 일부 여론들은 우리의 평화적핵활동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복귀와 국제원자력기



구(IAEA)와의 정상적인 협력하에서만 가능하며 우리도 그에 리해를 표시하였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핵동결에 대한 IAEA의 《사찰》은 반대하지만 6자회담참가국들의 《다자사찰》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하고있다.

구태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명백히 한다면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조성되면 핵무기계획을 포기하게 될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결 대 보상》 조치를 통하여 조미사이의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조성해 나가자는것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어 우리가 NPT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근본요인들이 해소되면 우리의 NPT복귀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때까지 평화적핵활동을 중단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평화적핵활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동결이나 폐기대상에 포함될수 없다.

오늘 NPT밖에 있는 나라들과 비핵지대에 속하는 나라들이 평화적핵활동을 하고있는것은 당연한 국제적현실이다.

따라서 NPT성원국이 아닌 우리 나라가 NPT에 복귀하기전에라도 이러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며 평화적핵활동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것은 아무것도 없다.

검증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명백하다.

우리가 천명한바와 같이 동결은 궁극적인 핵폐기에로 가는 첫 단계이며 동결에는 객관적인 검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검증이란 동결상태에 대한 감시를 의미한다.

우리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문제는 핵폐기단계에 가서나 논의해볼 문제이다.

동결단계에서부터 사찰을 론하는것은 매우 비논리적이며 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강박하러 드는것은 곧 무장해제를 위한 불순한 기도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제3차 6자회담이후에도 우리가 핵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사찰을 받은뒤 핵폐기까지 깨닫기전에는 보상할수 없다고 하면서 《선핵포기》 기도를 숨기지 않고있다.

이것은 조미가 정전상태, 기술적인 전쟁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우리보고 먼저 무장해제하라는것으로서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를 절대로 접수할수 없다.(끝)

##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제3차 6자회담 진행정형에 언급 (2004. 6.28.)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또 한차례의 6자회담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2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금까지의 회담들과는 달리 각측이 여러가지 제안들과 방도들을 내놓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회담에서 진전을 가져올수 있는 일부 공통적인 요소들도 찾아볼수 있었다.



이번에 미국측은 우리의 《동결 대 보상》 제안에 대하여 류의하면서 심중히 검토할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한 동시행동조치를 취할데 대하여서와 《동결 대 보상》 문제를 기본으로 토의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된것은 이번 회담이 이룩한 하나의 긍정적인 진전으로 된다.

그러나 조미사이에 의연히 커다란 의견상이가 남아있는것으로 하여 회담에서는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수 없었다.

중요한것은 조미사이의 불신과 오해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사이의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의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결실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시금 커다란 정치적결단을 요구하는대범하고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CVID 요구를 철회하는것을 전제로 핵동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여기에는 핵무기관련 모든 시설들과 그 운영으로 나온 결과물들을 동결하는것과 함께 핵무기를 더 만들지도,이전하지도,시험하지도 않으며 동결은 중국적인 핵무기계획폐기에로 가는 첫 시작이라는것이 포함된다는것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핵동결에는 반드시 보상이 동반되어야 하며 동결기간은 철두철미 보상여부에 따라 결정될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었다.

우리가 요구한 보상에는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봉쇄의 해제를 공약할뿐아니라 중유, 전력 제공 등으로 총 200만kw 능력의 에너지를 지원할데 대한 문제가 들어있다.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식의 제1단계행동조치로 되는 우리의 《동결 대 보상》 제안은 조미사이에 그 어떤 신뢰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핵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담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내놓은 우리의 신축성있는 제안을 적극 지지공감하면서 동결에 따르는 보상에 참가할 립장들을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기간 미국측과 거의 2시간반동안 진지하게 마주 앉아 회담하였다.

미국측은 이번에 핵동결에 따르는 보상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그들자신이 명명한 《전향적인 제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미국이 회담이 시작되여 9개월만에 그러한 제안을 내놓은것자체는 류의할만한 일이다.

또한 미국이 이번에 CVID표현자체를 들고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요구대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받아들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을 해부해보면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우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저들의 요구사항만을 단계적으로 털거한것으로서 우리의 일방적인 핵폐기가 깨개 완료된 다음에야 저들이 할바를 론의나 하겠다는 정도에 머물고있다.

특히 이 《제안》에서 미국이 핵폐기의 《3개월 준비기간》이라는것을 들고나온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인 억지주장으로서 그 누구의 지지도 받을수 없었다.

구태여 기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보상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좌우되는것이다.

회담참가자들이 미국의 《전향적인 제안》이라는것이 복잡하고 명백치 못하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르는 미국의 의무사항이 없으므로 불공정하다고 평가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동시행동원칙이 결여되고 《선핵포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안》은 회담참가국들을 납득시킬수 없었으며 문제해결의 방도로도 간주될수 없었다.

미국대표단이 회담에서 공약한대로 미국이 앞으로 우리의 《동결 대 보상》안을 심중히 연



구하고 우라늄농축이요 뭐요 하는 무근거한 주장을 철회하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철회를 공약하고 동결에 따르는 보상조치를 직접 취해나간다면 그것은 핵문제해결이나 미국의 리익에도 다같이 부합되는것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침략위협에 대처한 자위력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미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끝)

## ■ 노동신문 개인논평, 《우리의 동시일괄타결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003. 12. 15)

(평양 1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15일부 《로동신문》은 《우리의 동시일괄타결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계의 주되는 관심이 조선반도에 쏠리고있다.

6자회담을 재개하여 조선반도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만큼 6자회담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기대는 크다.

지금이야말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유관측들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과 관련한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때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다시금 밝혀였다.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이 일관하다.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것이 핵문제해결의 생명이며 조미사이에 합의해야 할 핵심사항이라는것은 6자회담에 립하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우리가 제기한 일괄타결안을 한번에 다 받아들일수 없다면 그의 첫 단계로서 우리가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에 의한 《테로지원국명단》에서의 해제,정치,경제,군사적제재와 봉쇄철회,미국과 주변나라들에 의한 중유,전력 등 에너지를 지원내용으로 하는 1단계 조치안만이라도 먼저 실현하자는 새롭고도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지금 세계의 대다수 여론들은 이러한 제안이 핵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의지를 다시금 밝힌것이라고 평하면서 미행정부가 이 제의를 선의적으로 대할데 대한 기대를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대통령 부쉬를 비롯한 미행정부의 주요인물들은 미국은 《조선의 핵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철퇴를 바란다》느니,우리가 《6자회담재개에 새로운 전제조건을 내놓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제안을 심히 부정적으로 대하고있다.

우리가 이번에 내놓은 1단계 동시일괄조치안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말 대 말》로 끝나는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유관각측이 바라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것이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 우리가 동시일괄타결안실현의 제1단계 조치로서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이전도 하지 않으며 평화적핵동력공업까지 멈춰세우는 동결조치를 제안한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가 아닐수 없다.

미행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아량을 《조건부》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라는것이 아니라 딴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될뿐이다.



문제를 풀자면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푸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1단계 행동조치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오늘에 와서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미국의 날로 커가는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로 커다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우기 부쉬 행정부가 집권하여 조미기본합의문리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오다가 그것을 전면 파기해버림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막대한 전력손실을 입었으며 그로 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지금 미국은 핵활동동결에 따르는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대하여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그것을 그 무엇에 대한 《보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다면 미국은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그래 미국이 아니었던 말인가.

우리에 대한 핵위협의 장본인이며 우리에게 막대한 물질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준 가해자인 미국이 피해자인 우리에게 핵동결에 따르는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로 보아도 옳은 처사가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1단계 행동조치제안을 내놓으면서 미국에만 대응조치를 요구한 것도 아니며 조선반도비핵화에 리해관계를 가진 모든 측에 다같이 그러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미국은 지금 《서면안전담보》가 마치 우리의 핵동결에 대응한 행동조치라든가 되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제 깨어질지 모를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

공약의 신빙성은 오직 실제적인 행동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하물며 우리 공화국의 적국이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무기를 전개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무력증강책동과 침략적군사연습까지 쉬임없이 벌리고 있는 미국이 제공하는 《서면안전담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믿고 하루아침에 모든 핵활동을 철폐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주장한다면 우리 역시 대화상대방인 미국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를 요구할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해나선다면 6자회담은 우리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백해무익한 말씨름장으로밖에 달리 될 수 없다.

미국이 《선택포기》 립장에서 벗어났다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 표현은 어떠한 동시일괄타결안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현 미집권자가 우리의 핵동결제안은 거부하면서 미국은 《완전한 핵철폐》를 바란다고 한 것은 아무런 논리적타당성도 없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제라도 미국이 우리의 동시일괄타결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바라는 핵완전철폐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한 제안에서 동시타결안에 대하여 그 어떤 언급도 피하였으며 본질상 《선택포기》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 마치 조선반도핵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그 어떤 관심이나 있는 듯이 표방해나서고 있지만 《선택포기》의 강도적 립장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서면안전담보제안》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만 품게 할 뿐이다. 보전대 미국은 문제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판장을 보려는 것



같다.

시간을 끄는것은 우리 공화국에도 나쁠것이 별로 없다.

미국의 지연전술은 우리 공화국을 끊임없는 핵억제력강화에로 떠미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끝)